

#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하라”

### ‘광복절’ 많은 비에도 시민들 집결 도시민단체 “아베 역사인식 비상식적”



15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과와 수출규제 철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도 여기에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외과거정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광복74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비가 많이 내렸지만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키며

‘피해자와 손잡고 끝까지 싸우자’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다. 강제동원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95)와 양극덕 할머니(90)도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임현영 공동행동 대표는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역사 정의,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유대와 친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반역사적인 정치인이 등장해

나라끼리 다투면 동아시아 전체가 함께 불행해진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제2차세계대전이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역사를 바로잡게 하려는 첫 관문”이라며 “일본이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욕망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오다가와 요사카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의장과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이 단상에 올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다가와 의장은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여기에 문제의 뿌리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위무성도 인정한 바이며 이를 인정해서 중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는 화해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화 제안도 거부하고 무역 문제를 끌어들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자세”라고 꼬집었다.

야노 사무국장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하

기는커녕 사죄와 배상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내 정치 상황이 간단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싸워온 마음에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극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다. 이 할아버지는 “복이 메 말을 다 못한다”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학교를 보내주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갔지만 일만 하고 고생을 하다가 왔다”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본을 규탄하고, 아베(총리)에게 사죄 한 마디를 듣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두 피해자가 단상에 오를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를 보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도 미리 전달한 서면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남북의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에게 굳은 연대인사를 보낸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자고 발언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뉴스1

## 광주서 부부추정 노인 2명 숨진 채 발견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남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8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남녀 노인 2명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노인들은 부부로 추정되고 있다.

남성인 A씨(80)는 상처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인 B씨(75)는 특별한 의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여성 몰카·집 안3차례 침입 30대 긴급체포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고 집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등 혐의의 이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말 광주 북구 한 주택이 골목에서 20대 여성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6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3차례 A씨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집에 침입해 물건들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에도 A씨 집에 침입한 이씨는 A씨와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씨는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을 복원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전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승용차서 불

15일 오전 2시 51분께 전북 전주시 고랑동 노블레스더센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약 19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난 아반떼 차량을 포함해 양옆에 주차된 차량 2대도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피방송을 하면서 주민 수십여명이 새벽시간에 건물을 빠져나오는 소동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아반떼 차량의 소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

## 남대문 오피스텔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8시2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시간 만에 만인 오전 10시30분 모두 진화됐다.

불이 난 건물은 사우나와 주거시설 등이 입주한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로,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8층 사무실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건물 8층 입주자 2명과 6층 입주자 1명이 대피하고 지하 사우나 시설을 이용 중이던 20명이 몸을 피하는 등 총 23명의 인원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나 병영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모텔서 50대 여성 살해 30대男 구속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최성수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혐의로 A씨(34)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모텔에서 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8·여)를 모텔로 불러 낸 후 목졸라 살해하고 금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모텔 6층의 한 객실에서 양손이 나일론 끈에 묶인 채 발견됐다. 얼굴 부위에는 다수의 멍도 발견됐다.

모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11일 오후 7시쯤 모텔 6층 객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이어 B씨가 12일 오전 2시쯤 A씨가 들어간 6층 객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뉴스1

## ‘74주년 광복절’ 아직도 뿌리깊게 남은 법조계 日 잔재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반일(反日) 감정이 유례 없이 치솟고 있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일제 잔재 지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법조계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들이 뿌리깊게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들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국가의 얼을 바로세우기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전에 아직도 가득한 일본식 표현

법조계 일제 잔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의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당시 법률을 만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글 표현이 아닌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고 그 번

역투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가령 형법 제319조 1항 주거침입죄에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쓰여있다. 여기서 ‘사람의 주거’를 우리말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사람이 거주하는’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일본말은 종속질 수식절에 들어가는 주어의 조사에는 の(노)를 붙인다”며 “해방되면서 ‘노’를 ‘의’로 토씨만 바꿔 우리말 문법에 안 맞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굳이 일본식 표현을 나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5월과 이달 9일, 민법 총칙편과 민법 물권편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삭제하거나 한글로 바꾼 ‘알기 쉬운 민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窮迫(궁박)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婬(요)하지 아니한다’를 ‘필요가 없다’로, 算入(산입)하다’를 ‘계산에 넣다’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의하여’ 등 일본식 표현도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의하여’는 일본어 ‘~によつて’(니요떼)를 그대로 옮긴 말이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지려전박’(知慮淺薄)은 ‘사리분별력 부족’으로, ‘작량감경’(酌量減輕)은 ‘정량참작 감경’으로 바꾸는 등 형법·형사소송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본식 표현인 ‘생(生)하였거나’는 ‘생겼거나’로, ‘형무소(刑務所)’는 ‘교정시설’로, ‘사체(死體)’는 ‘시체’로, ‘수진(受詢)’은 ‘진료’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은 ‘바로 위 상급법원’ 등으로 표현을 바꾼다.

◇ “조서 중심 형사재판도 일제 잔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한 조서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형사재판 실무도 일본 식민지의 잔재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것은 한국 형사법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낸, 형사법의 대가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다.

신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권을 보장한다면 판사가 만든 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식민지에서 (수사기관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판사는 일을 할 게 별로 없고 사법경찰관이 만든 조서만 봐도 되는 검찰은 조사를 안 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조서에 예심판사가 작성한 조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